

NEWS LETTER

2025-06-30

Legal Issue

-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관련 법적 대응
- [기업을 위한 신정부 정책 분석]
기술·자본·R&D·보안 변화 속, 법무 리스크에 대비할 때

MINWHO News

- [세미나 성료 소식]
법무법인 민후,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현수진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빛내다

Business CASE

Mi 법무법인 민후



Legal Issue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관련 법적 대응

최주선 변호사

2025년 5월 말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북 등 메타 SNS 이용자들의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서, 대부분 아동 성적 착취나 학대, 커뮤니티 무결성 정책 위반 등을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와 상관없는 계정들이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으며, 특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AI의 오작동이 유력하게 추정되었으나, 메타의 경우 소통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뚜렷한 원인이나 향후 조치 등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 신설 조문이다. 이는 EU의 GDPR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일명 '설명가능한 AI(XAI)'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거부권. 제1항).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도 요구할 수 있다(설명요구권. 제2항).

만일 정보주체가 이처럼 거부권 또는 설명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자동화된 결정을 취소하거나 인적 개입(사람의 검토 등)을 통해 다시 결정하거나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3항).

특히 이러한 조치는,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따라서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로서 억울하게 계정정지를 당한 경우이고 그것이 AI의 자동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근거하여, 메타에 대해 그런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정을 되돌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을 받는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8-3424
choijs@minwho.kr

Legal Issue

[기업을 위한 신정부 정책 분석]

기술·자본·R&D·보안 변화 속, 법무 리스크에 대비할 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식시장의 활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기업 역시 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법무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신정부의 주요 정책 중 기업과의 접점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기업법무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AI·IT 정책 : 기술의 가속화, 법적 리스크의 정교화

정부는 AI 강국 실현을 정책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AI 분야 예산 확대, 고성능 GPU 대량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은 기술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법적·윤리적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EU GDPR, ISO, HIPAA 등의 국제 규범에도 적합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준법을 넘어, 데이터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 정책: 주가조작·소액주주 이슈에 대비 필요

'주가지수 5,000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정부는, 동시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주주총실의무·집중투표제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법적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여부는 단순한 내부 의도가 아니라 행위 구성 요건과 증거 구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좌우됩니다. 또한,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다툼, 이사회 구성 문제, 충실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의 역할은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3. R&D 확대 정책: 연구개발 참여제한 분쟁 리스크

정부는 기초연구, 벤처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R&D 관련 기업법무 분쟁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 과제 참여제한 처분입니다.

연구 윤리 위반, 성과 미이행, 서류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과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사업 차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절차 준수 및 증빙 자료 보관, 공정한 성과 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산업기술 보호 정책: 기술 탈취 예방 및 증거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기술탈취 방지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 관련 분쟁에서는 '해당 기술이 기업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로 독자적 성과라 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탈취되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인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비밀 및 핵심 기술에 대해 체계적인 등급 분류, 접근 통제, 사내 보안 정책 정비 등의 사전적 보호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내재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자본시장의 변화, 연구개발의 확대, 그리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은 모두 기업의 기회이자 동시에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서 법무 대응은 단순한 '사후 방어'가 아니라, 사업 전략의 일부로 전환되어 '사전적, 선제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무 시스템을 갖추어 '기업하기 좋은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는 언제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MINWHO NEWS

[세미나 성료 소식]

법무법인 민후,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렌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세미나 성료 소식] 법무법인 민후,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렌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6월 18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 및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렌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70여 명의 기업 실무자 및 C레벨 담당자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질적 이슈와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세미나는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사고 대응 방법'을, 박영수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BM 설계 시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가 최근 중요 판례를 짚어보며 현행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신세계 정보보안 권남기 팀장이 'CPO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실무적인 시각을 공유하였습니다.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경품 이벤트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민후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전문성과, 개인정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의 실무적 노하우가 결합된 자리로,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및 기업 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기업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MINWHO NEWS

'현수진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빛내다

'현수진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빛내다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변호사 8기)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에 연자로 초청되어 의미 있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자산의 활용과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를 포함한 정보법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민후의 정보법 전문 역량을 공유하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분야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최신 법제 동향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발표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공공·민간 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디지털 정보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현수진 변호사는 본 행사를 통해 그의 실무적 식견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디지털 및 정보법 관련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법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 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업무사례

1.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응해 75% 감액 화해권고결정 도출
2. 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3. 미납대금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전액 인용 판결 승소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5.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6. AI기술 기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에 공공기관의 데이터셋 구축사업 용역 내용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7. 국내 최대 규모 취업 플랫폼사에 기업용 채용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보호 위수탁 관계 해당여부와 재위탁 구조 검토 관련 기업법률자문
8. IT기술 기반 통신 솔루션 제공 기업에 하도급계약서 불공정 조항 검토 자문 제공
9. 지식재산 분야 공공기관에 인사 조치 관련 법규상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제공
10. 글로벌 의류 브랜드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계약서(DPA) 검토 자문 제공

Mi 법무법인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